

약 20년 후 전국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 진입!

소멸위험지수는 젊은 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 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마스다 히로야(2014)의 저서 「지방소멸」에 착안하여 개발되었다.

감사원이 2021년에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에 따르면 2047년부터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시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준으로 한 전망으로 최근의 합계출산율(0.72명, 2023)을 반영하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넘버즈는 지역 인구 감소와 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구 소멸 환경 가운데 지역별 한국교회 교세 전망까지 살펴본다. 인구 구조의 지역별 변화가 한국교회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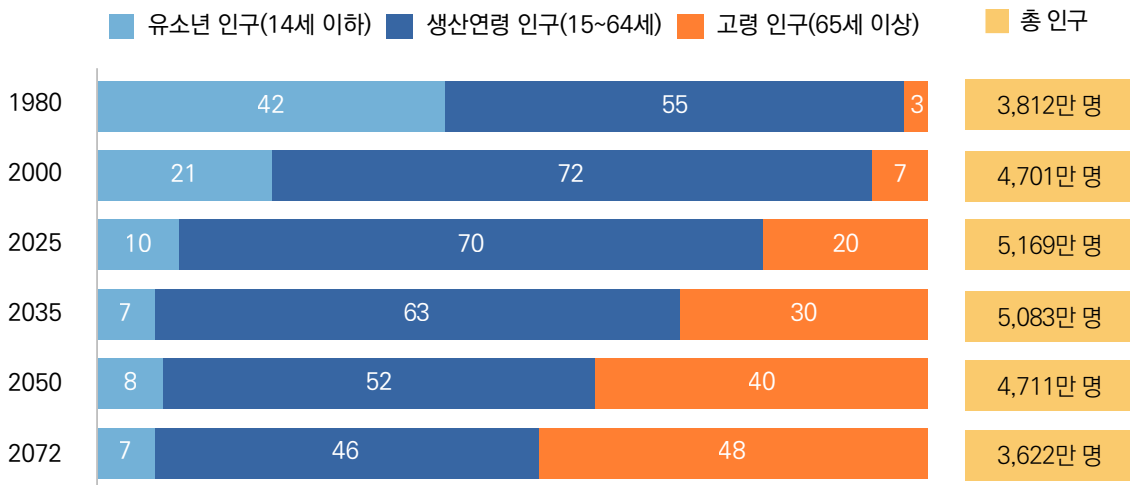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인구 변화] 50년 후 노인이 인구의 절반 차지!

- 통계청은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2~3년 주기로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정점(5,184만 명)을 찍은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약 50년 후인 2072년 인구는 3,622만 명으로 올해 2025년 대비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2025년 20%에서 2050년은 40%, 약 50년 후인 2072년에는 48%까지 이를 전망이다. 2025년에서 2050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총인구는 9% 감소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오히려 80%(1,051만 명→1,89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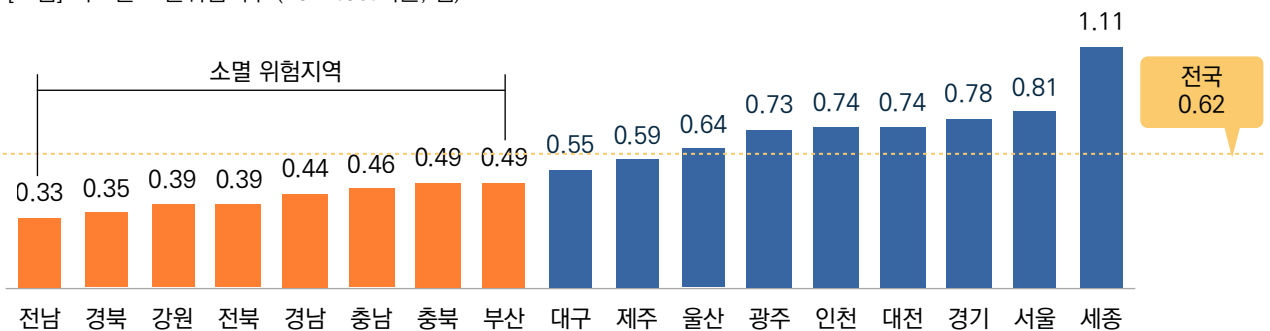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02

[지방 소멸 현황] 부산,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 진입함

-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0.5 미만일 경우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소멸 위험지역은 2016년 처음으로 측정한 이래 매년 증가 추세이다.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17개 광역 시도 중 소멸 위험지역은 8개로 나타났으며, '전남', '경북', '강원', '전북'이 0.4 미만을 기록했고,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그림] 시도별 소멸위험지수 (2024.03.기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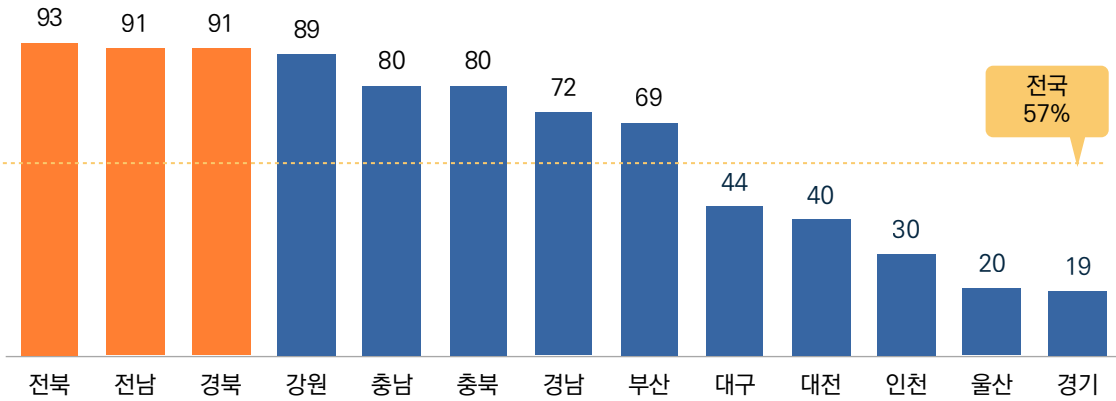
※출처 : 국가통계포털(www.kosis.go.kr), '주민등록인구통계', 2024.03.

Note)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 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

2024년 기준, 전라/경북 지역 10곳 중 9곳 소멸 위험지역!

- 소멸 위험지역은 시군구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중 130곳으로 전국 57%이 이르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전체 14개 시군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소멸 위험지역으로 확인되어 93%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과 경북은 91%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시도별 소멸 위험지역 비중 (시군구 기준, 2024.03.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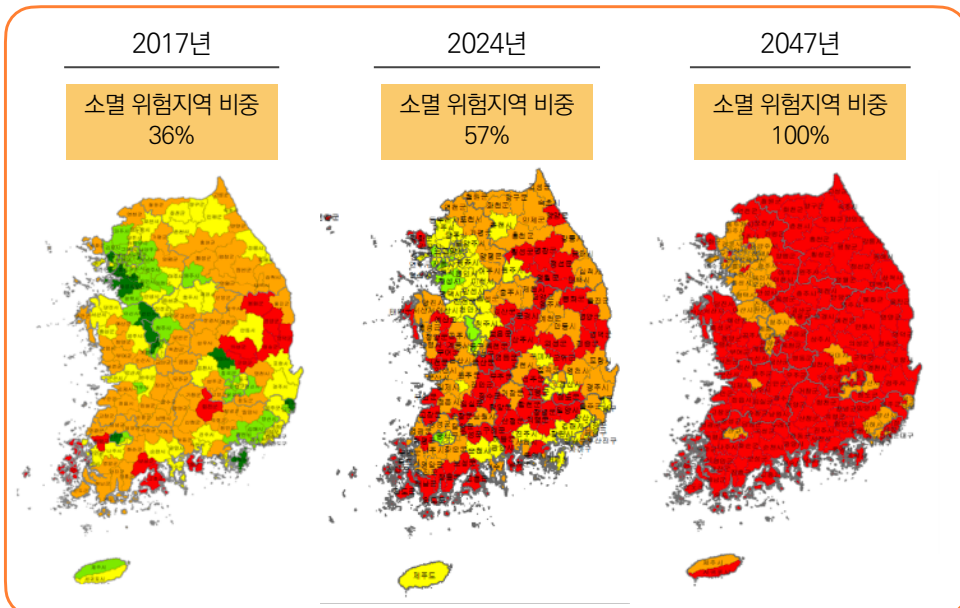


※출처 : 국가통계포털(www.kosis.go.kr), '주민등록인구통계', 2024.03.
 Note) 서울, 세종, 광주, 제주는 0%임

약 20년 후, 전국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 진입!

- 감사원은 인구문제에 대한 장기 대응 차원에서 현 수준의 초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미래 지방의 소멸 위험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용정보원과 함께 시군구별 향후 소멸 위험을 예측한 감사보고서를 2021년에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47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큰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고령층 중심 사회가 되어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매우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시군구별 소멸 위험지역 현황 및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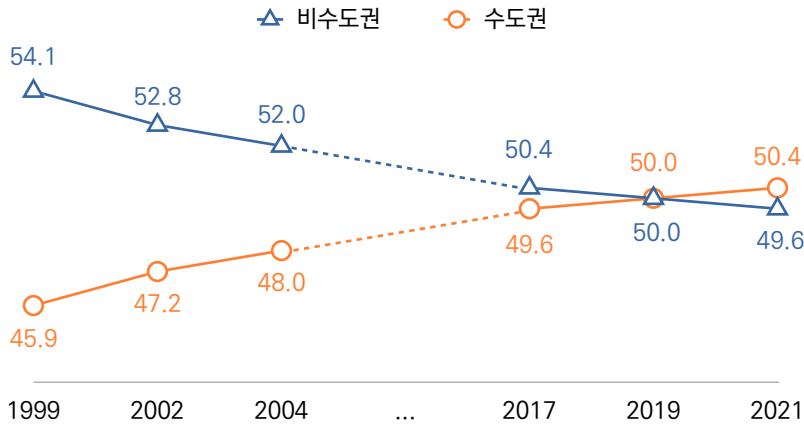
색상	명칭	소멸위험 지수
빨강	소멸 고위험 지역	0.2 미만
	소멸 위험 진입	0.2~0.5미만
노랑	소멸 주의단계	0.5~1.0 미만
연두	정상	1.0~1.5 미만
초록	소멸 저위험	1.5 이상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2024년 여름호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2024.06. 감사원, '감사보고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I (지역)', 2021.07.

지방 소멸 위험 증가 이유, 수도권 인구집중 지속 증가 추세

- 이토록 지방의 소멸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자리, 의료, 교육 등 정주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도 한몫을 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 이후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 그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그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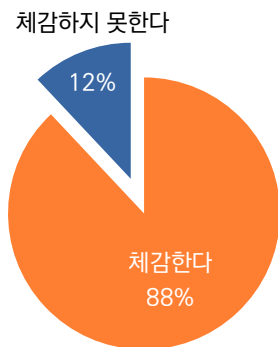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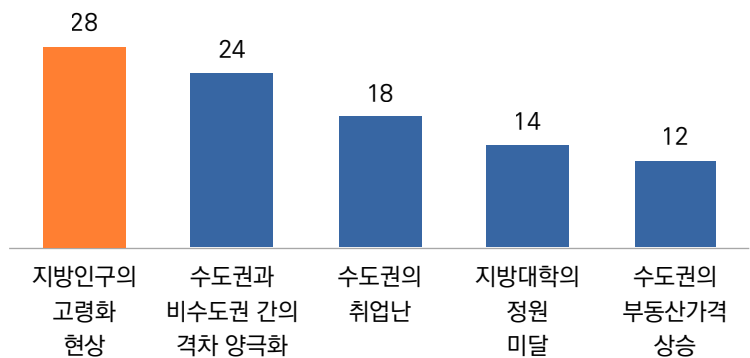
[지방 소멸 국민 인식] 우리 국민 대다수, 지방 소멸 위기 체감하고 있어!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우리 국민의 지방 소멸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본다. 지방 소멸 위기를 체감하는지에 대해 국민 대다수(88%)가 '체감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지방 인구의 고령화 현상'(28%)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양극화'(24%)가 가장 높았다.

[그림] 지방 소멸 위기 체감도* (일반 국민)



[그림] 지방 소멸 위기 체감하는 이유 (지방 소멸 위기 체감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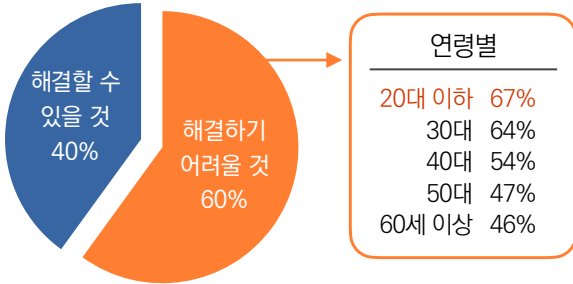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지방소멸 체감도 및 우선 지원책', 2022.10. (일반 국민 2,067명, 온라인 조사, 2022.10.11.~10.18.)

*4점 척도

우리 국민 10명 중 4명, '지방 소멸 위기 해결할 수 있을 것!'

- 이러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 10명 중 6명(60%)은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해 비관적인 입장이 더 컸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을 나타냈다.
- 그러나 40%의 국민은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림] 지방 소멸 위기 해결 가능성*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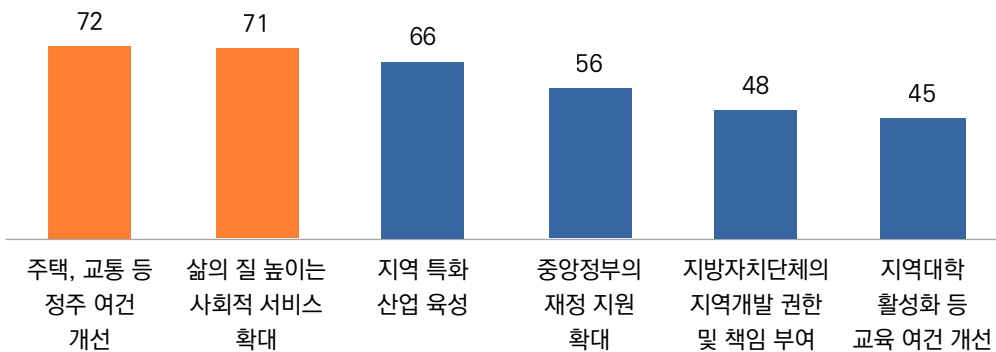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지방소멸 체감도 및 우선 지원책', 2022.10. (일반 국민 2,067명, 온라인 조사, 2022.10.11.~10.18.)
*4점 척도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대책, 경제/교육여건 개선보다 삶의 질 개선!

- 국민이 바라보는 지방 소멸 대응의 정책적 대안은 무엇일까? 한국행정연구원은 '인구 감소 시대의 국민이 바라보는 지방 소멸과 대응 정책' 이슈를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방 소멸 대응 정책으로는 '주택 및 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높이는 사회적 서비스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는 지역의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를 위한 요인으로 전통적인 관점인 경제 및 교육적 여건 개선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프라 개선에 대한 의견이 더 높았다.

[그림] 지방 소멸 대응 위한 지속적 발전 정책 (일반 국민, '긍정적' 평가 비율*,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3 정책연구 국민 수요조사', 2023.12. (전국 만 19~69세 남녀 3,000명, 온라인 조사, 2023.05.03.~05.15.)
*9점 척도로 1~3점: 부정적, 4~6점: 보통, 7~9점: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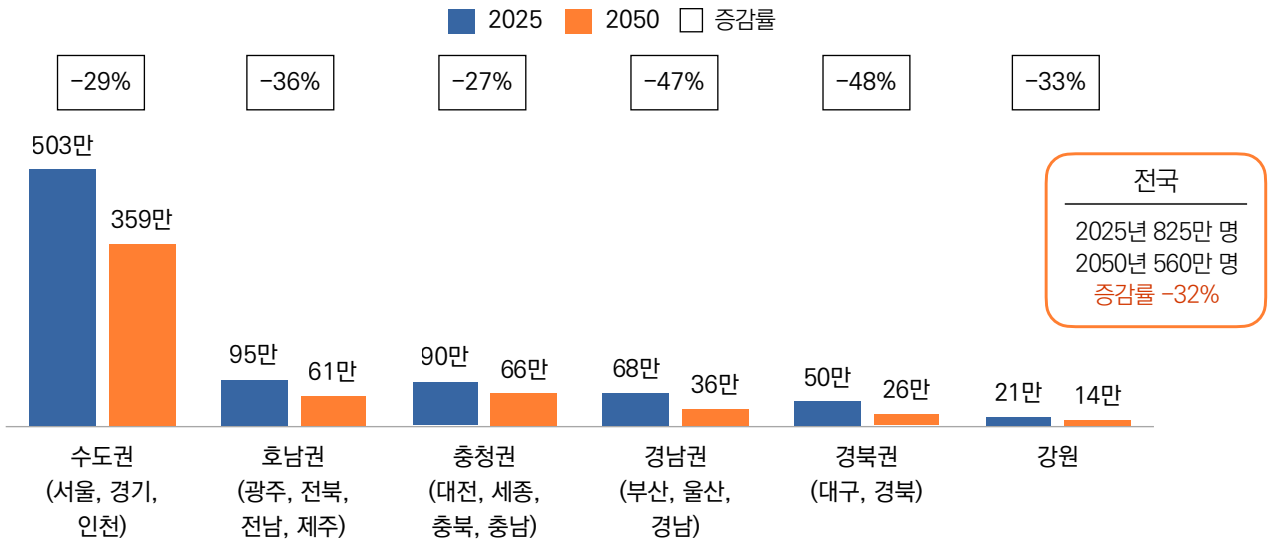
04

[한국 기독교 미래 전망]

이대로 가면 25년 후 경상도 지역 기독교인 수 절반 가까이 줄어

- 이러한 지방 소멸 위기 속에 한국교회 지방의 교세는 어떻게 변화할까?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교회총연합과 공동으로 2050년까지 한국기독교 인구수를 예측하는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분석을 최근 발표하였다.(넘버즈255호) 현재 한국교회가 놓인 조건과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에서 2050년까지 기독교인 수는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경상도 지역의 감소율(47~48%)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권역별 기독교인 수 전망 (명)



※출처 : 한국교회총연합/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현황', 2024.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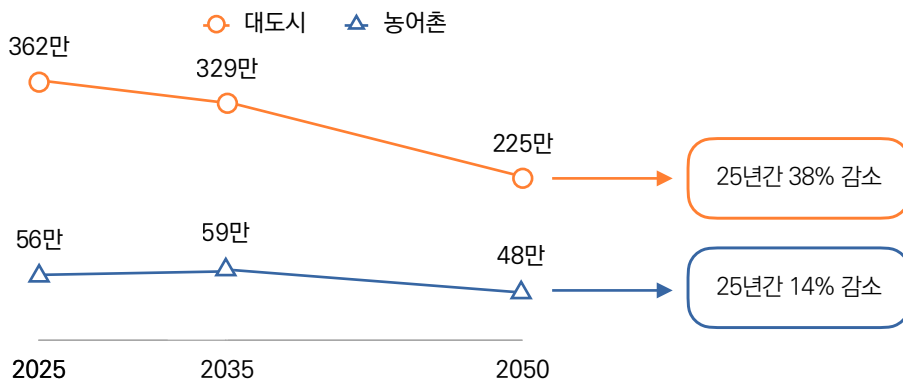
Note) 이 프로젝트는 한교총/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연세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 : 2023.10.18.~2024.01.03.)

농어촌 기독교인 수, 앞으로 10년 정도는 감소하지 않아

- 대도시와 농어촌의 기독교인 수 전망을 살펴본다. 대도시 기독교인 수는 2025년 362만 명에서 2050년 225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5년간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농어촌 기독교인 수는 대도시와는 달리 2025년 56만 명에서 10년 후인 2035년 59만 명으로 다소 증가하다가, 그 이후 2050년 48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대도시 vs 농어촌 기독교인 수 전망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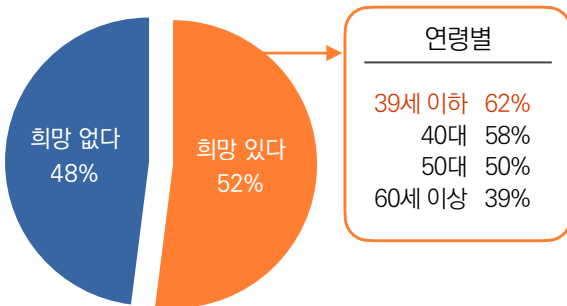


※출처 :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현황', 2024.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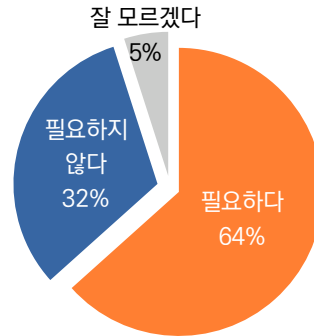
농어촌 교회 목회자 절반, '농어촌 교회에 희망 있다'!

- 농어촌 교회 목회자는 이러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 하는지' 질문한 결과, 52%가 '희망이 있다'라고 응답해 절반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희망이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은 목회자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 당분간 농어촌 기독교인의 증가 추세가 전망 되는데 이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의 희망적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 한편, '희망 없다'라고 응답한 목회자의 64%가 농어촌 교회의 '통폐합이 필요하다'에 동의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 어촌 교회의 생존전략 중 하나로 '통폐합'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농어촌 교회에 대한 희망 여부
(농어촌 교회 담임목사)



[그림] 농어촌 교회 통폐합 필요성 인식
('농어촌 교회 희망 없다' 응답자)



※출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농어촌 교회 실태 조사', 2023.1.27. (소속 농어촌 교회 담임목사 504명, 모바일 조사, 2022.11.9.~12.16)

이번호 요약

1. 약 20년 후, 전국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 진입!

-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었는데 2072년 인구는 2025년 대비 30% 감소할 것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사원은 2047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 이대로 가면 25년 후 경상도 지역 기독교인 수 절반 가까이 줄어!

- 현재 한국교회가 놓인 조건과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기독교인 수는 2025년에서 2050년까지 기준으로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경상도 지역의 감소율이 절반 가까이(47~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매년 증가하는 지방소멸위험지역 (한국고용정보원)

관련 성경 구절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아 29:11)

목회 적용점

넘버즈 창간호 주제는 바로 ‘인구 절벽’(2019.06.)이었다. 당시 인용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의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시점)를 2028년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2020년부터 감소가 시작돼 무려 8년이나 앞당겨졌다. 또한 정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약 378조를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 그만큼 인구문제는 심각하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넘어 교회의 목회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교회는 늘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질문을 받아왔다.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하게 교회의 미래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준다.

우선, 인구와 교인 수 감소 상황에서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하기보다 청소년, 청년 등 한사람의 기독교 가치관/세계관으로 무장된 크리스천을 세우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앙 수준과 생애 주기에 따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성경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 소멸은 지역 교회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목회자들은 ‘선교적교회 특징’으로 영혼 구원이나 해외 선교사 파송보다는 사회적 봉사 등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역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넘버즈 245호) 교회는 지역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또 교단이나 도시교회의 지원을 받아 교회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인구 감소 현상은 교회가 영혼의 질적 성장에 승부를 걸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지 모른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 앞에서 교회가 제대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